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 운영,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 근현대사기념관과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사례 검토 -

조 세 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민족문제연구소는 두 개의 작은 박물관 건립에 참여하고 운영을 맡아 역사문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나는 강북구에 있는 근현대사기념관으로 2016년 5월 17일 개관했다. 연구소는 설립 준비과정에서부터 참여하였고 현재 강북구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다. 다른 하나는 2018년 8월 29일 국치기념일에 개관한 용산구에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으로 시민성금으로 건립하여 짧은 기간에 작지만 알찬 박물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규모나 성격 면에서 민주인권기념관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지만, 위 두 작은 박물관에서 얻은 소소한 경험과 시행착오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념관으로서의 분명한 메시지 전달의 필요성

민주인권기념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한 명료하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것이다. 기념관의 방향성에 따라 전시 구상과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중점 과제가 무엇인지를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과정상의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관한 사고 지평의 확대

민주화운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념관의 전시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비중 있게 다루게 될 터이지만 시야를 넓게 가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 심화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건립과 운영의 선택과 집중

방대한 과제를 하나의 기구로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치유센터 등 전문적인 기능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해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제화된 전시의 지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소장 자료에는 전단·문서·문헌류가 많겠으나 가능한 한 실물자료나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영상 등이 배합된 종합예술의 느낌이 들게 하면 그 전시는 기법 상으로는 성공이라 하겠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 운영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건립의 전 과정과 운영 방향을 소상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수적이지만 공청회 등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도 거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동력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